

시장개방, 과연 위기인가 기회인가

출판계 반발로 잠정유보됐으나 현실화 따른 대책마련에 부심

지난 2월말 재무부가 출판 및 인쇄업종을 '외국인투자 자유업종'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식발표함으로써 올 한해 출판계는 출판시장개방 문제로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줬다. 선진국의 개방압력이 거세지면서 그동안 외국인투자 금지 혹은 제한업종으로 보호돼오던 51개 업종의 규제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출판계도 그 타격을 입게 된 것.

5년 앞으로 다가온 출판시장 개방

이 발표가 있자마자 출판계는 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를 중심으로 즉각 대책협의회를 구성, 반대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문화부와 재무부에 보냈고,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측은 당장의 전면적인 개방은 국내출판산업의 몰락을 초래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 반대의를 밝혔다. 인쇄문화협회(회장 박충일) 역시 "국제경쟁력을 갖출 동안 현행 금지업종 체제로 유지해줘야 한다"는 요지의 건의서를 재무부에 보냈다.

그 뒤를 이어 지난 3월 30일 출판문화협회, 인쇄산업협동조합, 인쇄문화협회, 제본공업협동조합, 서적상연합회, 출판연구소, 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출판산업발전대책위원회'(위원장 김낙준)가 결성돼 "출판시장 개방시기를 5년간 유예한 뒤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열 것"을 정부측에 제안했는가 하면, 4월 17일에는 16개 출판관련단체로 구성된 '출판·서점·인쇄·제본관련산업 개방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윤형두)를 결성해 개방저지결의대회를 대대적으로 갖고 정부의 무조건적이고 졸속한 시장개방을 반대하면서 공동결의서를 채택했다. 위원회측은 또한 출판진흥법·도서유통촉진법·인쇄진흥법·제본진흥법 등의 제정 및 산업분류의 재조정 등을 통한 문화정보산업발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4월20일에는 관련업계 및 재무부·문화부와의 간담회를 갖고 개방에 관한 상호 의견조정을 시도했으나, 재무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금지업종이었던 출판사업을 제한업종으로 변경한 뒤 이를 고시하고, 3년간 제한업종으로 묶었다가 96년경 자유업종으로 전환해 완전개방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출판계의 거센 반발과 항의운동이 계속되자 정부는 5월 1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출판·인쇄업을 제한업종으로 전환하되 97년까지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가기준을 마련

출판계도 이제 예외없는 개방화의

대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정부측과의 공방전 끝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얻은 출판계가

시장개방에 대응할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출판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데 앞으로 남은 시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 않기로 재조정, 당초 입장에서 한발 후퇴함으로써 전면적인 개방은 일단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에 이르게 됐다.

5년간의 유예기간을 얻은 출판계가 이후 출판시장개방에 대응할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시장개방에 대한 찬반론이 함께 제기되면서 시장개방문제는 이제 출판계의 다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정부의 개방결정에 대한 출판계의 즉각적인 반발은 우리 출판계가 전면개방을 수용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상황판단을 전제로, 개방시기를 늦추거나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출판시장개방을 둘러싼 출판계의 이같은 위기의식은 그간의 준비부족과 단일함에서 비롯됐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개방을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인정하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아쉽다는 불만만 거둬두고 있을 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방이 국내 출판계에 미칠 영향을 가능한 데까지 점쳐보고 우리의 취약 부분과 강점을 살피는 한편 개방은 국내시장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출판도 해외로 시장 개척에 나갈 수 있는 계기임을 직시, 상품개발 등 다각도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출판계

이런 요구에 따라, 지난 6월 출협 주제로 열린 제14회 출판경영자세미나에서는 '개방화시대의 출판발전전략'이란 주제를 내세움으로써 시장개방의 대응책마련을 위한 논의를 확산시켰다. 이 자리에서는 필요한 인재의 양성, 출판



지난 4월17일 출협강당에서 열린 '출판관련업 개방저지 결의대회'.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첨단기술의 적극적 도입, 새로운 마케팅전략, 경영혁신 등이 우리 출판계가 시급히 갖춰야 할 요건으로 제시됐다.

우리 출판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한편으로 프랑스 대형출판사인 아세트사와 문학전문출판사인 악트 슈트, 미국의 대표적인 다국적기업 출판사인 맥그로힐과 사이몬 앤 슈스터 등 외국출판사들은 개방을 코앞에 둔 국내 출판계를 둘러보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국제출판협회(IPA) 사무국장 알렉세이 코츠모프가 출협 초청으로 방한, 우리나라 출판계가 시장개방에 지나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아동물 예술 소설분야에서의 강점을 살리고 취약부분인 기술과학분야에서는 외국과의 공동출판을 모색한다면 시장개방은 오히려 국제무대에서의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출판계는 출판시장의 개방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유통업계와 전자출판 분야가 이들에 의해 잠식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서점을 통해서만 소비자와 만나게 돼 있는 현재 국내 도서유통방식이 나후한 유통체계를 그들이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첨단기술의 유통방식이나 다양한 판매방식을 통해 적극적인 수요창출에 나설 것임으로, 우리의 유통업에 일대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예상이나 인쇄업계 또한 기술과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3국에서 인쇄해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전혀 기술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전자출판이나, 학습참고서·아동물시장 역시 외국출판사가 손쉽게 잠식해들어들 수

있는 분야로 꼽히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예상되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판인들은 현재 난항중인 일산출판단지의 조속한 완공 등 유통문제라도 바로 잡아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무분별한 외국문화의 유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나, 저작권법, 출판이나 영업합리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재조정해야 외국출판사와의 경쟁에서 불필요한 손해를 입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도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밀한 자체점검을 비롯해 외국의 동향 및 출판현황을 분석하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개방화 추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출판계도 이 예외없는 개방화의 대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변화하는 출판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데 앞으로 남은 완전개방까지의 시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 정소연 기자